



기획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김대중 모델과 한국경제 97년 체제 **이병천**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장진호**

김대중 모델과 한국경제 97년 체제*

이병천

강원대학교

〈논문요약〉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전환이 중첩된 ‘이중 전환’을 겪었는데 그 두 전환 과정은 매우 불균등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 시기만큼 이 이중전환의 불균등성을 잘 보여 주는 시기도 없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25년 이후 다시 보수 정부가 재등장한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구축된 새로운 성장체제의 원형으로서 김대중 모델의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김대중 정부 시기 IMF 관리체제 아래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지난 시기 개발주의 체제 또는 ‘주식회사 한국’의 핵심 골격인 국가-재벌 지배연합 그리고 국가-은행-산업의 연계 관계는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해체를 통해 한편으로, 한국자본주의가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

* 이 연구는 2012년도 강원대학교 기초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명한 경쟁시장, 또는 기초적 질서 자유화의 틀을 갖추는 과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의 해체는 이 질서 자유화의 성과를 훨씬 압도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재벌과 외자주도 금융시장이 지배적 타협 구조를 이루는 가운데 노동자 및 서민 대중이 냉엄한 자유시장의 바다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그리고 낡은 주식회사 한국의 불공정한 위험 공유 및 공사협력체제는 파괴되었으나 새 민주적 조절형 시장경제의 길은 배제되었다. 그런 혼성적 신자유주의 형태로 사회경제적 계급, 계층관계 그리고 성장체제가 새롭게 재구축되었다. 김대중 모델의 바로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 민생 불안과 미래불안 그리하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유화를 가져온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 **주요어:** 김대중 모델, 97년 체제, 워싱턴 컨센서스, IMF 관리체제, 혼성적 신자유주의

1. 문제의 제기: 시장경제 이행과 한국적 길

개발연대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체제를 넘어 민주화 시대 탈추격 시장경제로 가는 한국의 경로는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1987년~1997년) 이후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에 와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러했지만 한국 또한 민주화 이후 금융 세계화의 도전과 마주했는데, 한국경제가 세계화와 시장

의 시대 파고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한 김대중 정부 시기다. 물론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기 이후에 다시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 10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경제에 일어난 성장체제 격변에 비할 만큼 심대한 새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과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을 전환점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경제 새 성장체제의 기본 골격이 짜여졌다고 생각하고 그 ‘김대중 모델’의 특징적 내용과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김대중 모델이라는 말을 단지 김대중 정부 시기에 형성된 성장체제라는 제한된 의미를 넘어서 1997년 이후 새롭게 탄생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 새 성장체제의 기본 ‘원형’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이행 과정은 세 가지 기본 의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어떤 유형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경제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의제들에서 자유시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제도주의적 접근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두 접근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이행 과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¹⁾

1) 어떤 유형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가

국가사회주의의 실패와 체제전환 사태가 잘 말해 주듯이, 현대 ‘거대사회’의 경제조정 질서를 시장경제를 넘어선 그 어떤 탈시장경제로 구

1) 자유시장주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대표하는 이행 전략인데 신자유주의 또는 흔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반면 제도주의적 이행 전략의 대표적 견해로는 스티글리츠(Stiglitz 2001, 127-171; 2002), Rodrick(2009) 등을 들 수 있다.

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붕괴이후 체제 개혁론의 기본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체제전환과 제도 이행은 단순한 탈규제 자유화가 아니라 시장경제 육성 또는 기초적 시장질서화의 과제를 안게 된다. 그런데 찰머스 존슨의 구분을 빌리면, ‘계획이데올로기’에 발목잡혔던 국가사회주의와는 달리 국가주도적 조절과 위협의 사회화에 기반한 동아시아형 개발자본주의는 국가·시장의 ‘공사협력’ 틀 또는 ‘계획합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탈추격 시장경제 개혁은 국가사회주의 개혁과는 역사적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추격 선도자경제로 가기 위해 동아시아 공사협력 모델 역시 시장경제의 육성 및 증진, 최소한 기초적인 질서자유화의 과제를 우회할 수 없다. 경제발전수준이 낮고 기업능력이 미약할 때는 발전촉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나, 탈추격시기가 되면 민간간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시장 협력 관계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

그렇지만 이런 생각 못지않게, 오히려 그 이상으로 강조되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장경제 유형, 그 제도적·문화적인, 국민적 다양성의 사고다. 자유시장주의는 시간과 장소를 떠난 시장의 추상적 보편성 논리에 입각하여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자유시장주의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최대한 사적 소유권과 한 묶음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국가개입과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방임주의는 물론 질서 자유주의의 경우도 그리 다를 바가 없다.³⁾ 그 반면에 제도의 정치경제학은 시장경

2) Aoki et al.(1997, 22-23).

3) 질서자유주의 또는 개혁적 신자유주의는 재벌의 천민성을 근대화하려는 점에서는 방임적 신자유주의와 다르나, 노동대중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력 제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방임적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다(김상조 1998). ‘공정한 경쟁’도 얼마든지 노동권 약화를

제의 다양한 유형과 국민적 다양성의 인식에 기초하면서 ‘어떤 시장경제인가’하는 문제 자체를 주제화한다. 경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장적 조절 및 사적 소유권제도의 ‘조절 실패’는 매우 심각하다. 그 때문에 경제적 조절 양식, 더욱이 중장기 발전지향의 조절양식은 반드시 시장, 국가, 그리고 제도의 적절한 혼합을 필요로 한다. 또 동일한 기능을 상이한 제도들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도의 ‘기능 등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⁴⁾ 이로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개발자본주의의 탈추격 진화의 길에서 국가, 시장, 제도의 배열을 새롭게 재구축하는, 어떤 새로운 ‘조절된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인가, 민주적 참여와 조절된 시장경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2) 어떤 방식으로 탈추격 시장경제로 이행하는가

목표로 삼는 시장경제 형태에 따라 이행 과정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주류 자유시장주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장 이행론은 급진적인 자유화와 사유화 전략 이른바 쇼크요법(shock therapy) 또는 빅뱅(big bang)형 전략을 제시한다. 시장 정책 패키지가 상호 상승 작용을 갖도록 하려면 전 방면에 걸쳐, 전속도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제도주의적 접근은 이 워싱턴 컨센서스식 급진적 전략이 해당 사회의 역사·구체적 조건, 시장·제도·국가의 복잡한 연관성, 개혁 순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조절능력을 과신함으로써 파

포함한 목자르기식 자유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상조는 이후 ‘구자유주의 결핍과 신자유주의 과잉’론으로 견해를 수정했다.

4) Rodrick(2009, 75-76).

과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본다. 반면에 제도주의는 해당 사회의 구체적 조건과 발전단계, 신제도구축의 능력, 시장·제도·국가의 보완작용,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보완성, 그리고 미지의 길을 가는 실험주의 등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이행기 일반의 위험이라 할 수 있는 생산 붕괴를 막고 이행과 성장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공급사이드 정책도 중시한다.⁵⁾ 우리는 이를 ‘제도착근적(institution-embedded)’ 이행전략이라고 부를 것이다.

3)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시장경제 이행의 기본 이슈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통합 방식의 문제다. 자유시장주의에서 전면 개방화는 자유화, 사유화와 함께 그 삼대 슬로건의 핵심적 구성 부분이 된다. 자유시장주의에 따르면 개방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정 경쟁질서를 수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중진국에 시장 규율을 부과, 강제하고 선진국 자본과 경영 기법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 논리에서는 특히 주변국, 반주변국에서 자본 세계화의 외압을 규제하는 자율적 국민경제 및 경제 정책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자본 자유화의 이점만이 무역 자유화와 함께 아무런 차별없이 주장된다.

반면에 제도주의적 접근은 시장경제 이행 과정에서 관리된, 선별적 개방을 옹호한다. 중진국, 개도국이 세계경제 통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전면 개방에 나설 경우, 이는 국민경제 내부연관

5) Rodrick(2009, 28-81).

을 파괴하고 정책 주권을 훼손함으로써 시장경제 이행은 물론이고 국민 경제 전반을 치명적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본다. 무분별한, 쇼크요법식 개방이 아니라 내부개혁 일정에 맞추어 개방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추면서, 순서잡힌 점진적 개방, 선별적인 관리된 개방을 제안한다.

시장경제 목표와 이행 방식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경합 구도로 볼 때, 국가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실험이 아주 대조적인 경로를 보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개발 자본주의의 전환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경로가 크게 대비되었다.⁶⁾ 대략적으로 말해서, 대만 및 중국이 개발주의 산업화 이후 제도착근적 경로를 걸었다고 한다면, 한국 및 러시아는 자유시장주의 경로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추진된 구조 조정은 ‘한국 스타일’의 자유 시장주의 코스로 가는 결정적 전환과정이 되었다. 이 시기 한국경제의 대대적 재편 작업에서 모방 표준(롤모델)이 된 것은 당시 글로벌 스탠더드로까지 승격되었던 미국의 레이건 또는 영국 대처 스타일의 시장경제였다.⁷⁾ 이에 따라 위험 공유와 공생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한국식 ‘조절된 시장경제’의 사고는 밀려 났다. 또 그 전환 방식은 급진적인, 쇼크요법식 전략이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통합방식에서는 IMF의 요구조차 초과 달성하는 전면적인, 급진적 개방화였다. 바로 이런 특징들이 1997년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을 자유시장적 접근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6) Yun-han Chu(2007).

7)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1998, 42-46, 79). 김대중(1997), 김균·박순성(1998), 이병천(2012b)도 같이 참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김대중식 구조조정이 ‘순수한’ 자유시장 접근을 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먼저, 세계체제 안과 밖 어디서에서도 자유시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란 것이 결코 ‘순수한’ 형태를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해당 국민경제의 특성 및 그 경로의존적인 힘과 결합되면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애초부터 신자유주의는 현실 시장경제의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주장해야 하는 모순적 과제를 안고 등장했다.⁸⁾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이른바 ‘포위된 민주화’의 조건에서 출현했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잘 알려져 있듯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발발을 계기로 IMF 관리체제의 외압 아래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1997년 이후 한국경제 구조 재편은 외압 일변도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는 IMF 관리체제 자체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으려는 김대중 정부의 생각도 크게 작용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IMF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가운데 그 힘을 빌려, 다시 말해 외압을 차용해 구조조정 작업에 자신의 제도개혁 의제와 요구를 삽입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유시장주의 자체가 그간의 실패 경험에 대한 반성 끝에, 제도와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보인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자체도 자유시장주의의 핵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좋은 지배구조’ 문제 등 제도주의적 접근을 선별적으로 수용했다.⁹⁾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다분히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¹⁰⁾

8) 유철규(2002, 224).

9) 로드리크(Rodrick 2009/2011, 32-34)을 보라.

이런 사정에 따라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경제의 구조 개편과 탈추격 시장경제 이행은 한국 스타일의, 특유한 ‘혼성적 신자유주의(Hybrid neoliberalism)’¹¹⁾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 이 글의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혼성적 신자유주의론은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 구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개발독재 유산 등 네 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병렬적 사중(四重)요소’론¹²⁾이라든가, 김대중 정부의 실험을 미완의 것으로 간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¹³⁾과는 다르다. 또한 이 글의 견해는 1997년 이래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금융 자유화와 개방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재벌을 지배 세력에서 떼어 놓는 ‘금융주도 신자유주의’론¹⁴⁾과도 대비된다.¹⁵⁾

이 글은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천과 이를 통해 출현한 한국형 신자유주의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순적 성장체제의 작동 논리를 출현시켰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하 본문의 제2절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수행한 구조 조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위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을 낳은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김대중 모델의 작동방식과 구조적 모순에 대해 분석한다. 제5절에서는 이 글의 분석 결론을 요약한다.

10) 해거드(Haggard 2000, 3-7)는 거시경제 관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펀드멘틀리스트’와 대비하여 자유시장주의 내의 이 새 흐름을 ‘신펀드멘틀리스트’라고 부른다.

11) 이병천(2012b)에서는 ‘잡종 신자유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주형(2011, 383)은 “경제 관료-재벌-초국적 자본의 과두권력” 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12) 대표적 논의로는 김기원(2001; 2002, 159-186)을 들 수 있다.

13) 홍중학(2011).

14) 대표적 논의로는 장하준 외(2012, 199)가 있다.

15) 더 자세한 논의는 이병천(2011; 2012a; 2012b, 128-139)을 보라.

2. IMF 관리체제와 구조 조정의 정치경제

1) IMF 관리체제와 김대중 정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한국정치에서 결코 자연스런 코스는 아니었다. 이는 극우 반공주의와 반호남 지역패권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특성, 그리고 김대중에 대한 수구 보수세력의 집요한 사보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정부의 출범과 경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행되게 됐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칼 폴라니가 갈파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무력한, 연성 자유주의 정권의 실패는 ‘파시즘적 길’의 온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60년 장면정권이 붕괴하고 박정희 정권이 등장한 것이 한 가지 실례이며, 또 김영삼 정권 시기 ‘박정희 신드롬’이 일어난 것도 그런 정치경제적·문화적 경향성을 보여 준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부독재로 역행하지 않을 정도로는 진전이 되었던 것이며 바로 이 대목에서 김영삼 정권이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만약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로까지 비화되지는 않고 당시 신한국당이 국정운영 실패를 다소간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 주었더라면 김대중은 대권 장악의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1997년 외환위기가 갖는 의미는 매우 복합적이다.

첫째, 외환위기는 냉전 보수 정권의 승계가 아니라 탈냉전 개혁 자유주의 지향을 지닌 김대중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게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위기는 한국사회가 냉전안보와 성장중독 사회로부터 탈냉전 ‘정상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또 위기는 보수·수구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포진해 있는 이른바 ‘포위된 민주화’의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의 대내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었고

김대중 정권이 재벌개혁 및 노동개혁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그렇지만 위기는 김대중 정권의 대외적 자율성을 유례없이 위축시켜 그 행동 반경과 지향을 크게 제약했다. 이는 김대중의 발전 이념과 정책을 종래의 ‘대중(참여)경제론’에서 ‘디제이노믹스’로 변질시킴으로써 한국이 탈냉전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의 패권전략에 순응하도록 단단히 결박했다.¹⁶⁾

1997년 이후 한국경제는 김대중 정부의 추진력 그리고 IMF 관리체제 및 이를 통한 미국의 압력이 결합됨으로써 그 진로가 좌우되었고, 이들 힘의 협력에 의해 전례없는 한국경제의 자유화를 향한 구조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보다 주요한 규정력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IMF 및 미국의 규정력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1997년 이후 외압이 강제한 신자유주의적 발전 경로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자율적 운신편을 가졌던 김대중 정부의 개혁 지향성과 그 고유한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는 IMF 관리체제 자체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으려 했으며 그리하여 IMF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가운데 ‘외압을 차용’해 구조조정 패키지에 자신의 제도개혁 의제와 요구를 삽입하고자 했다. IMF 및 미국의 외압 없이 김대중 정부의 독자적 힘만으로 전례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김대중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 및 통합력, 그리고 질서 자유주의적 개혁 지향이 없었더라면 IMF 및 미국의 외압이 한국에 내재화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그렇게 볼 때 김대중 ‘민주개혁’ 정부는 한국에서 IMF 관리체제, 그리고 미국식 시장자본주의 규범과 월가 금융자본의 요구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수용되는 데 최적의 정부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16) 이병천(2000), Hundt(2005) 참조.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편입됨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IMF를 창구로 한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과 자기 요구의 관철이다. 미국은 일본이 제안했던 아시아 통화기금안은 물론 개별국가 수준에서 일본의 대한국 금융지원 채널을 봉쇄하고 창구를 IMF로 단일화시켰다. 미국은 월가 금융자본과 미국식 시장경제 규범—‘글로벌 스탠더드’로 알려진—그리고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 IMF 대표단의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을뿐더러, 최초 IMF 협약에는 없는 ‘IMF 플러스’의 개혁을 강제했다.¹⁷⁾

김대중 정권은 외압에 밀려 대외적 자율성은 거의 발휘하지 못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외압을 빌려 제고된 대내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재벌과 노동 양측에 대해 국가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시기 김영삼, 노태우 등 연성 시장정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재벌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환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었던 터라 수세적 위치에 몰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투적 노동’ 또한 외환위기라는 비상 상황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나타난 일반 국민의 단합된 위기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권은 5대 재벌과는 ‘재벌개혁 5원칙’에 합의했고, 또 노동측과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서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대한 노동측 합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 이른바 ‘포위된 개혁’ 속에서도 김대중 정권이 재벌 및 노동 모두에 대해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시민 단체의 역할도 컸다. 참여연대 등 한국의 NGO는 IMF 관리체제를 질서 자유주의적 공정시장 개혁, 특히 재벌개혁의 기회로 간주하면서, 김대중

17) ‘IMF플러스’ 구상의 내용은 최초로 한국측 김기환 경제협력 특별대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F 플러스 개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중앙일보』, 2002.1.3, “DJ노믹스 미완의 개혁 1부, 1. DJ의 면접시험”; 지주형(2011, 196-207).

정부와 사실상 ‘협치관계’를 이루고 이를 지원했다. 시민 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옹호하는 하나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큰 저항없이 수용하게 만든 또 하나의, 아래로부터 요인이었다.

2) 구조조정의 정치경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제1단계는 1998년 이후 1999년 중반 대우 그룹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시기다. 이 1단계에서 제일 급선무는 물론 외환위기와 외채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했다. 외환, 외채 위기가 진정되자 구조조정 작업의 제1순위에 오른 것은 금융 분야였다. 이는 금융 부문의 위기 관리와 선정상화가 전체 경제구조 정상화에서 불가결하다는 점도 물론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구조적 이유는 금융을 시장화하여 국가-금융-산업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IMF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이다.¹⁸⁾ 이에 따라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 합병, BIS 자기자본 비율의 도입, 대대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이를 통한 은행 부실채권 정리 작업이 추진되었다.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많은 은행들이 헐값으로 투기적 외자의 수중에 넘겨졌다.

다음으로, 재벌 개혁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강화), 상호지급보증 철폐에 더해, 재무구조

18) 자세한 것은 이병천(2001, 42-55), 지주형(2011, 250-276)을 보라.

의 획기적 개선(부채비율 200% 이하), 핵심 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 강화(계열사 축소, 빅딜 등),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원래 IMF가 요구한 기업부문 구조개혁안은 외자가 한국 시장과 기업을 좀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을 뿐이고, 재벌 총수의 전횡과 독단적 경영을 가능하게 했던 소유·지배구조나 문어발식 다각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재벌개혁 5원칙에는 김대중 정부가 생각하는 바 기초적인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내재적 개혁 사고가 일정하게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다른 한편,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서 5대 재벌에게는 빅딜과 자율적 구조조정, 6대 이하 재벌에게는 워크아웃이라는 별개의 방식이 적용되었다.²⁰⁾

제1단계 구조조정 작업은 대우재벌 그룹이 붕괴되는 사태를 맞으면서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1단계의 이런 문제점은 제2금융권, 특히 투자 신탁의 구조 조정이 지체된 데 있었다. 투신은 재벌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재벌의 중요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기이후 투신에 대한 느슨한 규제 감독을 이용하여 재벌들이 투신과 회사채 시장을 통해 대거 차입자금을 조달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²¹⁾

19)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1998) 참조. 재벌개혁 5원칙 중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⑤항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원칙이다. 이 원칙이 들어간 것은 김대중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비상대책위 기획단장이던 이현재는 이 부분을 뺀 네 원칙을 만들었을 뿐이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⑤항을 넣었기 때문에 재벌 구조조정이 ‘애매하게’ 흘러가게 됐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이현재 2012, 61-64).

20)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상조(2002, 58-59).

21) Cho(2002, 79-84); 전창환(2004, 29-31).

그렇지만 한국형 성장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1~2단계에 이르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점이다.

첫째, 앞서 본 것처럼 1단계 구조 조정에서 대대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한국의 은행은 이제 주로 단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 기관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자본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자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그럼으로써 한국경제는 종래의 개발주의적 국가-금융-산업 관계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는 결정적 문턱을 넘어 서게 된 것이다.²²⁾ 둘째, 정부는 한편으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방향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외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재벌 측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조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허용, 의무 공개 매수제도의 폐지 등에 맞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출자 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했다. 또 1979년 이래 오랫동안 과세해 오던 법인 간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조치도 단행했다(익금불산입제도).²³⁾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재벌들이 자사주 관리를 통해 주가를 부양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 방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²⁴⁾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는 원래 경제민주화와 대적점에 있었던 것인데, 외자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부실계열사 정리를 위해 지주

22) 지주형(2011, 265).

23) 자세한 것은 김진수(2004); 최은희(2004).

24) 자사주 취득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은 이병천(2012a), 김대중 정부가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무기한 연기해 금융실명제를 퇴색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김정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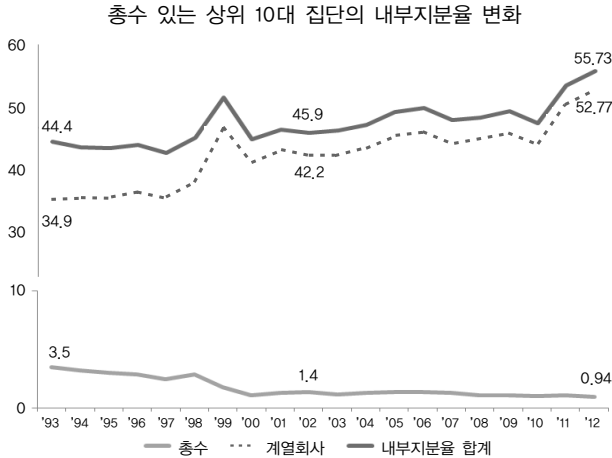
〈표 1〉 김대중 정부의 재벌규제 완화정책

항목	내용
지주회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 12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해 지주회사 금지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1차 개정) • 1999. 2 일반지주회사 제도 도입 • 2000. 10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 2009. 7 금산분리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 순자산의 40%로 제한 • 1994 순자산의 25%로 강화 • 1998. 2 폐지 • 2001. 4 재시행, 25% 한도(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는 한도 없음) • 2002. 1 예외 확대(출총제 대상 자산 5조 원 이상) • 2007. 4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6조에서 10조로 늘리고 출자한도 40% • 2009. 3 공식 폐지
배당소득세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 1 일반 법인 배당금 익금산입 전액 과세 • 1980. 1 기관투자가 배당금 90% 익금불산입 • 199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배당금비과세 • 2000. 1 지주회사에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 2001. 1 법인가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자사주 취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2 자사주 취득한도 종전 5%에서 10%로 확대 • 1998. 5 자사주 취득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3 이내로 확대 • 1999. 5 자사주 취득한도 완전 폐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1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30%까지 허용

회사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이를 다시 허용해 준 것도 매우 중요한 재벌규제 완화조치다.²⁵⁾ 바로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재벌의 계열사 간 출자가 대폭 늘어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그림 1〉 참조). 물

25) 지주회사 규제완화의 구체적 경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서보미(2013) 참조.

〈그림 1〉 재벌 내부지분율의 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론 구조조정으로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계열사 숫자는 대폭 줄어들었다. 요컨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란 ‘IMF-미국-월가 복합체’가 부과하는 외압에 순응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 공정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열사 출자 확대를 통해 총수 경영권을 방어하고 재벌체제를 유지, 옹호하도록 하는 대폭적 규제완화 조치를 내장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재벌과 외자 주도 금융자본이 공생 지배하면서 노동자, 서민 대중을 시장의 고통 속에 빠트리는 한국 특유의 ‘혼성적 신자유주의’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²⁶⁾

26) 김대중 정부 재벌정책 전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강병구(2005) 참조.

대우그룹사태 직후에 김대중 정부는 광복절 축사에서 1차 재벌개혁 5원칙에 다시 3대 보완과제(대기업의 금융지배 억제,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및 부당 내부거래 방지, 대주주 변칙상속 및 증여 금지)를 더한 이른바 ‘5+3원칙’을 제시하였다. 폐기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다시 부활되었다(2001년). 그리고 고용전략을 겸한 신성장전략으로서 코스닥과 벤처기업의 육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제2단계의 기업통치구조 개선 시도는 재벌의 저항 및 수구 기득권 세력의 공세, 그리고 단기실적주의에 경도된 정부의 약한 구조개혁의지, 금융 불안 등의 사정이 겹침으로써 조기에 실종되고 만다.

〈표 2〉 소유자별 주식분포 추이(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기준 %)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	8.58	11.0	19.72	16.43	14.35	8.14	5.66	4.54	4.40	3.98
기관투자가	27.95	26.23	13.64	16.90	13.42	15.75	15.85	16.70	17.64	19.60
증권회사	4.72	2.16	1.29	0.69	0.98	0.67	0.72	0.66	0.47	0.53
보험회사	5.78	6.53	3.60	2.71	1.14	2.79	2.26	2.80	2.23	2.17
자산운용회사	6.17	2.97	2.41	8.50	6.74	4.63	5.98	4.58	3.73	6.80
은행	10.72	10.18	3.09	2.97	3.05	6.60	5.51	5.91	8.14	6.90
종금, 저축은행	0.57	1.01	0.74	0.96	0.39	0.62	0.68	0.32	0.23	0.21
기금 공제회	-	3.38	2.51	1.07	1.12	0.45	0.70	2.42	2.83	2.98
일반법인	17.16	19.45	19.78	19.11	22.00	17.16	20.15	18.95	18.00	18.27
개인	37.57	29.59	28.87	25.87	20.04	22.32	22.33	19.70	18.00	18.43
외국인	8.74	13.73	17.98	21.69	30.19	36.62	36.01	40.11	41.97	39.73

자료: 한국거래소, 『KRX Market』

주: 1993년은 주식수 기준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2001년 2월 이후에 ‘상시 개혁체제’로의 전환을 공표하기에 이른다(구조조정이 퇴각하는 3단계). 이어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를 기회로 삼은 재벌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공세에 떠밀려 재벌 개혁정책은 급격히 후퇴해 버렸다. 30대 대기업 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외 및 예외 확대,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보유한도 및 의결권 제한의 완화 등, 시장 질서화 과제 분야에서 중대한 반개혁 조치가 김대중 정부 집권 말기에 일어났다.²⁷⁾ 그리고 이와 같은 친재벌 내지 재벌에 포획된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은 노동에 대한 포섭정책에서 배제 정책으로의 전환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집권 말기 반노동·친재벌 정책기조를 비롯한 김대중 정부 사회경제 개혁의 보수적 퇴행 그리고 부패·비리 게이트 공화국으로의 추락 현상은 앞선 정권과 매우 닮은 데가 있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된 데는 이 정부가 이전 김영삼 정부가 저질러 놓은 외환위기 사태를 인수받아 IMF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이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보수·수구세력에 ‘포위된 민주화’와 경제력 집중의 조건 속에서 개혁이 진행되게 됐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요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그 존재가 가질 특별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²⁸⁾ 문제는 개발주의 이후 한국경제 새 대안적 진로를 바라보는 김대중 정부의 생각, 시장이 민주를 꺾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사고방식 및 경제 운영 능력 전반에 걸쳐 있다고 하겠다.

27) 김상조(2001; 2002), 서보미(2012).

28) 최장집(2010, 212-216)을 보라.

3. 경기회복 요인과 수출독주 성장체제로의 전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새롭게 재편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가 충격적으로 닦쳐온 것만큼이나 이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IMF 관리체제로부터 졸업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의 우등생으로,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1997년 5.8%에서 1998년 -5.7%로 추락했던 실질 성장률은 1998년 후반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1999년 10.7%, 2000년 8.8%로 증가했다. 2001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4.0%에 그쳤지만 이 성장률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었다(〈표 3〉 참조).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이처럼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일까. 나아가 단기적 경기 회복을 넘어서 한국경제는 어떤 새 성장체제의 기제를 구축한 것일까. 사실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V자형’ 조정 패턴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놀랄 일은 못된다. 왜냐하면 종래 외환위기의 경험에 의하면 V자형 회복패턴은 예외라기보다 오히려 정상 형

〈표 3〉 외환위기 이후 실질성장률과 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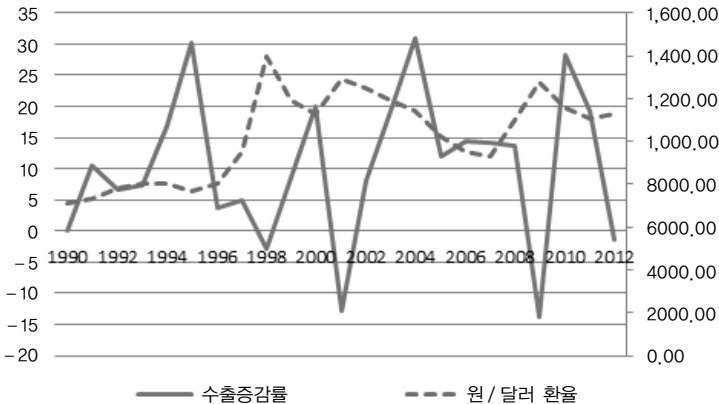
항목명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5.8	-5.7	10.7	8.8	4.0	7.2	2.8	4.6	4.0	5.2	5.1
민간소비증감률	4.0	-12.5	11.9	9.2	5.7	8.9	-0.4	0.3	4.6	4.7	5.1
설비투자증감률	-8.4	-40.6	37.5	32.9	-8.3	7.3	-1.5	3.8	5.3	8.2	9.3
수출증감률	5.0	-2.8	8.6	19.9	-12.7	8.0	19.3	31.0	12.0	14.4	14.1

자료: 한국은행

태이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정작 우리가 보다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V자형 회복 그 자체보다는 구체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불황의 수렁에 빠졌다가 재빠르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이 회복세에 어떤 성격의 새 성장체제의 작동 기제가 장착되었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먼저, 수출 독주 체제를 낳은 경기 회복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해 보고, 다음 절에서 더 본격적으로 김대중 모델의 전반적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고환율과 수출 증대: 위기 직후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원화 가치가 자유 낙하하다시피 폭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기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수입 급증과 국제수지 악화

〈그림 2〉 수출증가율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29) Park and Lee(2001).

〈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부문별 추이(%)

	1970~1986	1987~1996	1997~2005	2000~2005
소비비중	63.5	57.6	53.4	52.7
투자비중	21.7	34.9	30.7	29.8
내수비중	85.2	92.4	84	82.5
수출비중	12.2	20.2	41.4	45.1
경제성장율	7.6	8.1	4.1	4.5
소비증가율	6.7	8.2	2.3	2.8
투자증가율	11.5	12.2	1	2.9
내수증가율	7.8	9.6	1.8	2.9
수출증가율	17.5	10.9	12.4	10.6
소비가여도	4.3	4.7	1.4	2
투자기여도	2.4	4.2	0.1	1.3
내수기여도	6.7	8.9	1.5	3.4
수출기여도	1.8	2.4	5	5.1

자료: 홍순영 외(2006, 57-58, 63-64)

를 초래한 기본 요인으로 작용했던 기초적인 원화 과대평가 상황이 해소되고 수출 비용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간 수출 의존도가 높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획기적으로 높아진 한국경제 97년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환율 절하가 경기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컸다. 다시 말해 고환율은 단지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 기간 일어난 현상으로 그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기 반전된 고환율 추세는 이후 수출 독주 및 수출, 내수 양극화 성장체제를 작동시키는 정책 기조로 고착화되기에 이른다(〈그림 2〉, 〈표 4〉 참조).³⁰⁾

(2) **국제 환경:** 그렇다고는 해도 대내적 고통을만으로 빠른 회복은 어려웠다. 대외적으로 1995년 4월 ‘역플라자 합의’ 이후 약 2년 반 동안 지속된 엔화 약세 추세가 부분적으로 시정된 것이 주효했다. 엔화약세의 재조정은 동아시아위기가 세계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미일 간 새로운 환율정책 협조에 기인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회복은 미국의 10년 호황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불안하게 흔들렸던 미국의 경기 회복이 재개되어 IMF 위기 이후 약 3년 동안은 미국 경제 경기확장 국면의 절정기에 해당했다. 바로 이런 사정이 특히 한국의 IT 관련 제품 수출 증대를 떠받쳤다. 미국의 IT, 주가거품이 붕괴하고 대미수출이 급감하자, 2001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신용카드의 규제완화, 가계대출 증대 등의 조치를 통한 내수 부양 그리고 대중국 수출 붐이 완충 작용을 했다.³¹⁾

(3) **거시경제정책 전환:** IMF의 초기 ‘돌팔이’ 같은 처방, 즉 긴축 재정 및 고금리 정책이 수정되고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으로 돌아선 효과가 매우 크다. IMF는 사실 한국 현지사정에 아주 무지했다. 또 고질적인 시장만능주의 사고 때문에 한국경제의 구체적인 사정과 특성을 잘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IMF는 11월 말 한국과 구제금융제공 협상을 할 때 태국에 적용했던 프로그램을 숫자만 바꿔 그대로 들고 오기도 했다. 그러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와 재정적자 체질의 중남미 국가들에 맞추어 만들어진 긴축·고금리기조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전혀 특성이 다른 한국 경제에 만능약으로 처방하여—1998년 초 콜금리가 30%를 상회할 정도

30) 자세한 것은 이병천(2011, 49-53).

31) 전창환(2002; 2004).

였다—‘불지르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재벌이 지배하고 고부채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에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IMF의 처방³²⁾에 대해 한국 정부가 쉽게 순응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³³⁾ 정부 당국, IMF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불황 바닥으로 가라앉고 돌팔이 처방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높아지자 비로소 IMF는 1998년 하반기부터 확장정책으로 선회하게 됐다. 그러니까 IMF의 긴축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히려 케인즈주의적 거시확장정책이 신속한 회복을 가져왔다고 보아야 한다.³⁴⁾

(4) 구조조정 정책: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얼마나 회복에 기여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다. 왜냐하면 이 정책 효과는 성격상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유화 및 개방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를 통한 노동 규율의 재정립 등 영미식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구조 조정 정책이 외자와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 패닉으로 야기된 유동성 위기를 수습할뿐더러 비용 절감을 통한 축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음은 아주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른바 ‘시장 규율(특히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체제 즉 한국경제 ‘97년 체제’ 원형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32) 김상조(2002, 53-4)를 보라.

33) 스티글리츠(Stiglitz 2002, 94)는 이렇게 쓰고 있다. “...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침묵했다. 나로서는 그들이 왜 침묵했는지 의아했지만 한국경제가 회복된 2년 뒤 다시금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정부관리들로부터 한마디의 대답도 듣지 못했다.”

34) 신장섭·장하준(2004, 109-113). 또한 이들에 따르면 외자가 돌아와서 한국경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외자가 되돌아왔다.

서는 후술한다.

4. 김대중 모델의 작동 방식: 새 성장체제의 빛과 그림자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정부 시기 이행기의 한국경제가 이전에 정부·재벌·은행의 협력·밀착관계로 짜여진 ‘주식회사 한국’의 ‘관치경제’ 폐해를 잘 견어낼 수 있겠는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식 복합 불황의 덫에 걸려들지 모른다는 지적들까지 있었다. 또 설사 이를 벗어난다 해도 중남미식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즉 종속적 금융투기 경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조차 있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경제는 적어도 이런 우려들은 불식하고 일본병과 중남미병, 좌우 두 압초를 피해가는 데는 성공했다. 한국 현대경제사상 가장 과격하고 급격하게 단행된 경제적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급진적인 대외개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시스템이 여러 극단적 우려에 비해 웬만큼 작동하게 된 것만큼은 다행이고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행’은 ‘불행’과 함께 다가온다. 이제 김대중 모델이 어떻게 짜여져 돌아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기 구조 조정으로 지난 시기 ‘주식회사 한국’의 핵심 골격에 해당하는 국가와 재벌의 지배연합은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 국가는 더 이상 전략적 산업정책의 유도자로 재벌 투자를 조절하지 않는다. 물론 금융통제의 기반 위에서 정책 금융을 할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된 개발주의 공사협력체제의 자유화 과정에서 상실되고 공백 상태에 빠졌던

재벌 규율 메커니즘이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구축되게 되었다. 즉, 국가가 주도적 조절자 위치에 있던 개발주의적 국가·재벌·은행 연계 체제는 이제 자유화되고 전면 개방된 금융시장이 재벌을 규율하는 형태로 변모되었다. 사실상 글로벌 시장의 일부분이 된 자본시장이 주가 등락을 중심으로 재벌과 대기업을 규율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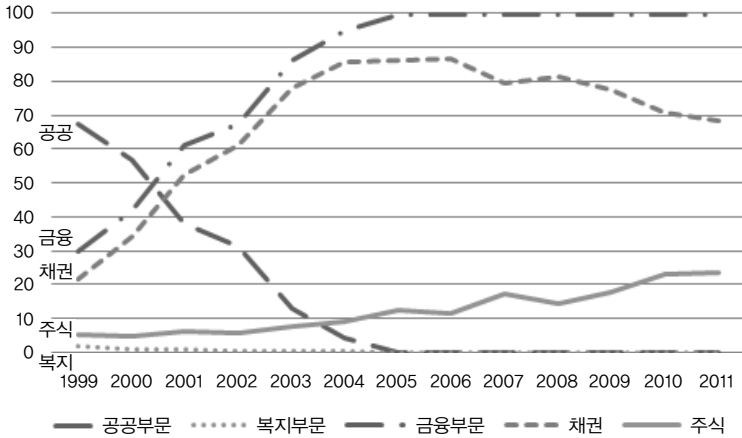
전면 개방된 자본시장의 중심부를 차지한 것은 외국 자본이다. 위기

〈표 5〉 상장회사 상위 20대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율(%)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비중	외국인지분율 (2005)	외국인지분율 (2009.6.8)
1	삼성전자	17.76	54.60	45.22
2	한국전력	4.41	30.23	26.76
3	현대차	3.55	47.81	31.68
4	국민은행	3.54	84.57	57.52
5	POSCO	3.45	66.95	46.20
6	LG필립스LCD	3.28	54.91	29.07
7	SK텔레콤	3.11	48.33	45.83
8	KT	2.4	48.80	39.49
9	하이닉스	2.07	8.28	14.86
10	우리금융	1.97	12.43	8.30
11	LG전자	1.92	35.79	24.80
12	신한지주	1.92	64.39	52.45
13	S-Oil	1.75	50.00	45.97
14	신세계	1.32	45.28	44.54
15	KT&G	1.29	63.11	49.15
16	SK	1.27	53.57	30.52
17	외환은행	1.24	73.79	69.37
18	현대모비스	1.24	47.76	38.00
19	하나은행	1.18	76.07	61.69
20	기아차	1.05	36.08	9.87

자료: 류상영(2010, 92), 원자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그림 3〉 국민연금 운용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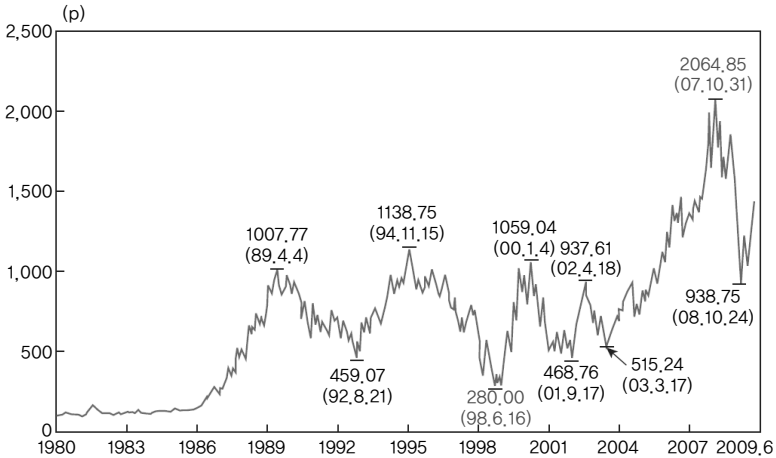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이전 1993년 8.7%에 불과하던 외자의 비중은 2003년에는 무려 40.7%로 치솟았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보유주식이 제조업, 금융, 통신 등 전분야에서 국내 톱의 우량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지분율 또한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표 5〉 참조). 또 외자가 선호하는 이들 기업은 배당수익률 및 주가상승률도 높고 주주가치 창출 능력이 높다.³⁵⁾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은 김대중 정부시기에 이미 공공부문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에 금융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부문 비중 증대의 압도적 비중은 채권이 차지했고 주식 비중은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그림 3〉 참조). 주가 지수의 추이로 보자면, 김대중 정부

35) 최수미(2013).

〈그림 4〉 주가지수 추이(코스피 지수)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은행(2012, 274)에서 재인용

시기에 주가의 회복은 최고점을 찍은 2000년 1월에도 아직 외환위기 이전 최고점인 1994년 11월의 지수(코스피 지수)를 밑돌았다. 그러나 이후 주가 지수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7년 7월에 처음으로 2,000을 돌파하게 된다(〈그림 4〉).

그렇지만 재벌과 금융시장의 관계는 결코 금융시장이 일방적으로 재벌을 규율하는 관계만은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김대중 정부는 미국식 스탠더드를 지향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익금불산입제도), 그리고 자사주 취득제한의 전면 폐지 등의 조치에 의해 재벌이 계열사를 유지,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고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 시장이 재벌을 규율할 뿐 아니라 재벌 또한 자본시장

에 적응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자, 서민 대중에 대한 압박 및 총수 사익의 추구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양상, 즉 재벌과 외자주도 금융자본간의 교묘한 공생형태, 즉 한국스타일의 혼성적 신자유주의 체제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³⁶⁾

둘째, 정부는 부실 금융 기관의 회생을 위해 약 169조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그 비용을 사회화, 국민화했고 이를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은 상당 정도 정리가 되었다. 그 결과는 어땠나. 은행과 기업 간에는 지난날의 ‘헌신(commitment)’ 관계가 아니라 ‘거리두기’ 관계가 정착되었다. 은행은 산업, 기업 금융보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 금융에 주력하게 됐다. 또한 한국의 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 이래 투기성 외자가 가장 깊숙이 침투함으로써 한국경제가 탈국적화된 대표적 영역으로 탈바꿈했다.³⁷⁾

셋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수행한 또 다른, 핵심적 기초 작업은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 관계를 재구축하는 일이었다. 재벌 대자본은 구조조정의 격변을 거치면서 소유·통제권을 보장받았던 것이며 이를 통해 축적 위기를 수습하는 새로운 계급 구조적 유인과 규율 기

36)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과 자유화된 금융자본이 지배적 타협을 이루는 가운데 노동과 민중 부문을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포섭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영미식 신자유주의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재벌체제가 존재한다는 점, 금융자본의 주도 부문은 외자라는 점, 대자본의 힘을 견제하기에는 노동의 힘이 미약할 뿐더러 분단되어 있다는 점, 복지국가 단계(‘자본주의 2.0’)를 건너편 채 신자유주의로 나아갔다는 점, 주식보유의 대중화가 덜 진전되었다는 점, 자산적 개인주의 경향은 무척 강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실질적인, 물질적 동의 기반은 취약하다는 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 A’, 한국식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 B’로 유형화한다. 이에 대해서는 듀메닐과 레비(Dumenil and Levy 2011), 이병천(2012b, 128-138) 참조.

37) 자세한 것은 장진호(2011) 참조.

제가 재구축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 시장의 급격한 유연화와 이중 또는 분단(구조)화,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파업 탄압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아래 ‘노동 규율’³⁸⁾이 재정립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래 개발독재 구체제에서 노동 규율은 주로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정치력에 의해 지탱되었다. 그렇지만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고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노동 계급에 대한 체제의 정치적 대응력은 약화되었었다. 임금도 크게 상승했다. 일찍이 칼레츠키³⁹⁾는 선진 자본주의의 발전 동학에서 완전 고용이 야기하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자본가들은 완전 고용이 지속되어 해고 위협이 노동 규율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매우 불건전하게 보고 그래서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이 케인즈주의적 복지 자본주의 동학에서 이 문제에 봉착했다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개발자본주의의 균열 속에서 그 새 진화 방향을 둘러싸고 ‘한국적 칼레츠키 모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는 문제와 대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 노동자 ‘고통전담식’의 급격한 유연화 및 이중화가, 노동규율이 이완된 ‘불건전한’ 자본주의를 새롭게 재편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새롭게 재구축해 준 셈이다.⁴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개발주의의 결정적 해체와 한국식 신자유주의 도래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⁴¹⁾ 김대중 정

38) ‘노동규율’이라는 말은 마르크스 『자본론』 1권 〈시초축적〉 제28장의 핵심어이기도 하다.

39) Kalecki(1971).

40) 이병훈(2002); 윤진호(1998). 그 이전 김영삼 정부 말기에 노동법 파동이 있었다.

41) 유철규(2002, 233-234), 이병천(2012b, 44-49, 100-101).

〈표 6〉 역대 정부 시기별 소득분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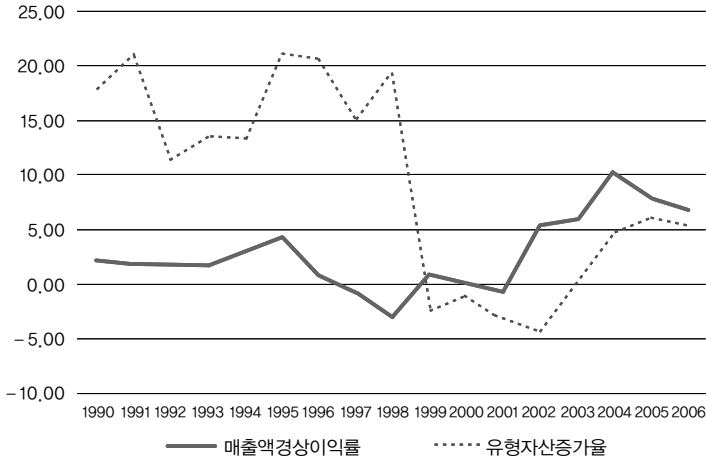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니 계수	0.254	0.260	0.287	0.292	0.302
5분위 배율(배)	3.6	3.8	4.4	4.5	4.7
상대 빈곤율(%)	7.9	9.3	12.4	14.9	17.2
중산층 비율(%)	75.4	73.8	68.4	67.6	65.2

자료: 강신욱(2013)

부 시기에는 지니 계수, 소득계층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그리고 중산층 비율 등을 포함하는 소득분배 기본 지표들 모두가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기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표 6〉 참조). 노동과 서민 대중으로부터 대자본으로, 가계에서 기업으로 심각한,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넷째,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난 한국경제 97년 체제 기본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기업경영 방식이 위기 이전에 주로 차입에 기반한 외형확장 지향으로부터 자본 수익성을 증시하는 경영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는 1997년을 전후로 유형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경상이익율 추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설비투자의 대리 지표로 볼 수 있는 유형자산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매출액 경상이익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1997년 이전에는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유형자산 증가율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서 기어가고 있었으나, 1997년 이후에는 부진한 유형자산(-설비투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이런 수익성의 개선은 주로 순금융 비용의 감소 그리고

〈그림 5〉 유형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제조업, 대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인건비의 절감에 기인한다.⁴²⁾ 그렇다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성장 지향적인 종래의 개발주의적 관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수출주도—조립가공—슈퍼 재벌대기업에서 경로 의존성은 상당히 유지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자본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주주 가치에 연동시킨다. 자사주의 취득, 처분은 그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⁴³⁾

다섯째, 거시경제 순환의 수요 측면은 어떤가. 1999년~2000년 시기 경기회복은 IT 산업이 주도했는데 이는 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42) 그러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정구현 외(2008, 137-140), 이병천(2011, 31-32)을 보라.

43) 자세한 것은 이병천(2012a).

한 수출 확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거품 붕괴와 경기침체로 IT 관련제품 수출이 침체하자 국내 민간소비 지출이 확대됐다. 이는 신용 카드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⁴⁴⁾ 및 저금리 정책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초래된 것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는 그 동전의 뒷면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식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는 동시에 부채기반 성장체제의 성격을 갖게 됐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소비증대에 약간 영향을 미치긴 했겠으나—미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주식시장을 외자가 지배해 배당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라밖으로 누출되고 있는 한국적 조건에서 주가상승에 따른, 의미있는 부의 효과를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약한 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이 측면에서도 한국식 신자유주의의 물질적 동의 기반은 미약하다.

그런데 김대중 모델을 두고서 한국에서 어떤 영미식 ‘금융 주도 축적체제’의 성립을 말하는 논자들이 있다.⁴⁵⁾ 이는 일찍이 케인즈가 말한 바, 비활동계급(투자자) 대 활동계급(노동자+기업가)의 대립을 연상케 하는 인식인데 한국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터널을 통과한 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과 달리 여전히 강력한 재벌체제가 엄존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자체 내에 처음부터 재벌측 요구를 수용하는 지점들이 있음을 특별히 강조해서 보인 바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경제 산업 경쟁력의 중심 또한 제조업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슈퍼 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벌체제는 여전히 계열사간 출자로 연결되어 있고 총수 지배력은 유지되고

44) 김순영(2011).

45) 장하준 외(2007; 2012)를 보라.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적 검토는 이병천(2012b) 참조.

있다. 총수 가문의 출자가 감소된 반면 계열사 간 출자는 오히려 증대했다(〈그림 1〉). 또 한국의 자본시장은 내생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빅뱅식으로 급조되어 외자가 그 중추를 지배하고 있고, 외형만 커졌을 뿐 매우 얇은 시장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계 자산의 구성이다. 한국의 가계자산 구조에는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높다. 금융 자산에서도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예금과 보험·연금 등의 비중이 높다. 유가증권과 예금 간의 이동도 심하다. 한국은 투자는행과 기관투자가가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투자 성향이 극심하고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

5. 결론: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유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전환이 중첩된 이중 전환을 겪었는데 그 두 전환의 과정은 불균등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 시기만큼 이 이중 전환의 불균등성 또는 부조화를 잘 보여 주는 시기도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동안 재편된 한국경제를 보는 눈은 무척 다양하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25년이 되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보수 정부가 승리한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새 성장체제의 기본 원형으로서 김대중 모델의 특징과 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구조 조정은 탈추격 시장경제를 향한, 한국 특유의 자유시장적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시기 개발주의 공사협력체제 또는 ‘주식회사 한국’의 핵심 골격인 국가와 재벌의 특권

성장연합 그리고 국가-금융-산업의 연계 관계는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 이런 개발주의 기본틀의 결정적 해체 과정을 통해 한편으로 한국자본주의가 고질적인 ‘관치경제’ 유산을 청산하고 절차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장 또는 기초적 질서 자유화 틀을 갖추는 과제에서 일정한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의 해체는 이런 절차적 질서 자유화의 성과를 훨씬 압도하고도 남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는 관치경제의 문제도 근본적 치유를 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지배 사태를 초래한 것이었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힘으로 재벌을 규율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만, 재벌과 외자주도 금융시장이 지배적 타협 또는 공생형태를 이루는 가운데 노동자 및 서민 대중은 냉엄한 자유시장의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 시기 ‘주식회사 한국’의 불공정한 위험 공유 및 협력체제는 파괴되었으나 새 민주적 조절형 시장경제의 길은 배제되었다. 그런 혼성적 신자유주의 형태로 사회경제적 계급, 계층관계 그리고 성장체제가 새롭게 재구축되었다. 이 글의 결론은 김대중 모델이 보여 주는 바로 이런 두 가지 지점에서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 민생 불안 및 미래 불안 그리하여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자유화’를 가져온 한국경제 97년 체제의 기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참고문헌

강병구. 2005. “재벌정책의 변화와 평가.” 강신준 외.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

회적 쟁점』. 나남.

- 강신욱. 2013.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소득불평등의 변화.” 미발표.
- 김균·박순성. 1998.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김기원. 2001. “구조조정 정책의 의미와 평가.” 장세진 외. 『김대중 정부의 4대개혁－평가와 과제』. 여강출판사.
- _____. 2002.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
- 김대중. 1997.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 산하.
- 김상조. 1998. “김영삼 정부의 개혁실패와 경제위기.” (이병천·김균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_____. 2001.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 제한 완화의 문제점.” 『재벌 및 금융부문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_____. 2002. “재벌 금융개혁: 김대중 정부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2/2.
- 김순영. 2011. 『대출 권한하는 사회』. 후마니타스.
- 김정진. 2009. “불로소득 비판에서 ‘부자되세요’까지.” 9/15(<http://www.redian.org/archive/26188>).
- 김진수. 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문인철 외. 2008. 『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한국학술정보.
- 서보미. 2012. “재벌에 차칸 대통령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겨레 21』. 11/26. 937호.
- _____. 2013. “지주회사 뒤에서 재벌은 씨익 웃는다.” 『한겨레 21』 05/06. 제959호.
- 신장섭·장하준. 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창비.
- 유철규. 2002. 신자유주의. 김수행·신정완 편. 『현대마크스 경제학의 쟁점』. 서울대 출판사.

- 윤진호. 1998. 한국사회의 실업문제와 대책.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이동연. 2012. 『아! 대한민국, 재벌공화국』. 북오션.
- 이병천·김균 편. 1998.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이병천. 2000. 한국형 발전모델의 역사와 전망. 학단협 편. 『전환시대의 한국 사회』. 세명서관.
- _____. 2001.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이병천 편.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당대.
- _____. 2004. “한국 사회경제의 양극화와 탈민족화의 함정.” 사회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_____. 2011.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동향과 전망』 81(봄).
- _____. 2012a. 한국경제 97년 체제의 특성에 대하여. 『동향과 전망』 86(가을 겨울).
- _____. 2012b. 『한국경제론의 충돌』. 후마니타스.
- 이병훈. 2002. “2002년 대선과 노동문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
- 이현재. 2012. 『위기를 쏘다』. 중앙북스.
- 장진호. 2011.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와 계급적 재생산구조의 변화.” 조돈문 외 편.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메이데이.
- 장하준 외. 2007. 『왜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 _____. 2012.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대한민국 정부.
- 전창환. 2002. “미국 신경제의 종언과 한국경제의 향방.” 『창작과 비평』 2002(겨울).
- _____. 2004. “김대중 정부이후의 한국경제.” 김진방 외. 『위기이후 한국자본주의』. 풀빛.
- 정구현 외. 2008. 『한국의 기업경영 20년』. 삼성경제연구소.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1998. 『한국경제위기와 재벌개혁』. 정책대안시리즈 1.
- 최수미. 2013. “외국인이 선호하는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LG주간경제』. 10/29.
- 최은희. 2004.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최태욱. 2009.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37호(겨울).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국은행. 2012. 『한국의 금융시장』.
- 홍순영 외. 2006.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1987년체제와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 홍종학. 2011. “김대중 정부의 진보적 자유주의 실험.” 최태욱 편.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폴리테이아.
- Aoki, M. et al. 1997. “Beyond the East Asian Miracle.” In Aoki M. et al.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larendon Press.
- Cho, Y-J. 2002. “Financial Repression, Liberalization,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of Korea’s Financial Sector Policies.” *ADB Research Paper*. No.47. Nov.
- Haggard, Stephan.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undt, David. 2005. “Legitimate Paradox: Neo-liberal Reform and the Return of the State in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2.
- Kalecki, Michal. 1971. “Political Aspects of Full Employment.” In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1933-19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Y. C. and J. H. Lee. 2001. "Recovery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
A paper prepared for Conference on *Management of Currency Crisis*.
NBER.
- Rodrick, Dani. 2009.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제현주 역.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북돋움, 2011).
- Stiglitz, Joseph. 2001. *Joseph Stiglitz and the World Bank: The Rebel Within* (ed. with a commentary by Ha-Joon Chang). Anthem Press.
- _____.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orton(송철복 역. 『세계화와 그 불만』. 세종연구원, 2002).
- Yun-han Chu. 2007. "Re-engineering the Developmental State in an age of Globalization: Taiwan in Defiance of Neoliberalism." In Jung-En Woo M., ed.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Reform in East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투고: 2013.3.31 심사: 2013.4.11 확정: 2013.5.7